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 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6 | 2025.03.10 (2025.03.04~2025.03.0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04~2025.03.0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는 등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40인)**」,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산정 시 적격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3인)**」 ,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의원 등 10인)**」 ,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외통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 현안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6
-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9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40인) 1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15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3인) 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17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19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0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의원 등 10인)····· 2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2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26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5 (2025년 3월)
- [국제상사중재] 국제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활용 범위 - 분쟁해결 합의 시 주의점
- [지적재산권] 특허의 출원일 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명시적 비밀유지약정 없이 상당수 납품되었음에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지적재산권]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SG]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5 (2025년 3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기획재정부 | <p>「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월 중 국회 제출 | 2025-03-05 |
|-------|--|------------|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농진청 등 장·차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민간) 한국산업은행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됨.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함.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예)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임

정부는 금일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임.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 가상융합산업 선도기업 육성·인력양성·기반조성 등 전방위적 지원 추진

2025-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융합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융합세계 기업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가상융합산업 기술 혁신과 청년 창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콘텐츠) 발굴 및 실증을 위한 제작 기반 시설 활용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힘

- ① **(기업육성 및 세계 진출)** 기업의 개발역량 확보와 실증 사례 축적을 위한 산업융합형·기술선도형 가상융합세계 온라인 체제 기반(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11개 과제)과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인공지능·가상융합세계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발(충청권 4개 지역)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작품(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올해도 신규 선정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
 - 수출 자문·교육 및 현지 관계망 구축을 지원하는 수출 유망 강소기업 육성(19개사 내외), 맞춤형 구매·유통경로 발굴 및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홍보·판촉 지원(17개사 내외), 주요 전시 참가를 통해 권역별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세계 시장 확대(30개사 내외)를 체계적으로 추진
 - 국내 디지털 작품(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주요 산업분야(제조·교육·방산·의료 등) 기업 간 협력 기반의 융합 과제(3개 내외)를 대상으로 현지화 및 신규 수요처 발굴과 동반 수주활동 등 전략적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추진
- ② **(인력양성)** 기업현장 수요 기반 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500명),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 개발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 가상융합산업 연구실(메타버스 랩/총 4개교, '25년 신규 1개교), 청년 가상융합산업 개발자·창작자를 양성하는 가상융합산업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140명),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가상융합산업 융합대학원(총 8개교) 운영 등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부터 융합형 고급인력까지 체계적으로 양성
- ③ **(기반시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4.2월)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 제작 지원 및 실증·시험 등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운영
 -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판교·서남권)·KoVAC(상암)·메타버스 지원센터(13개소), 홀로테크 허브(전북 익산)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가상융합세계 작품(메타버스 콘텐츠) 실증과 시험 등을 지속 지원

- KoVAC(상암, 68개실), 디지털콘텐츠성장지원센터(안양, 27개실), 메타버스 허브(판교, 24개실)의 기업 입주공간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

④ **(기술개발)**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의 실감 작품(실감 콘텐츠) 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 공간컴퓨팅 환경에서 고도화된 시각 및 촉각을 구현하는 초감각인지 공간컴퓨팅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래프) 기술개발 등 총 29개 과제를 지원

⑤ **(저변확대 등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해석이 모호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본격 지원하며, 발전적인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시적인 현장 의견수렴 및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

- 민간 주도의 산·학·연·관 협력 연결망인 「가상융합산업 연합체(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상융합세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일괄처리창구인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하여 가상융합산업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KMF), 가상융합세계 개발자 경진대회, 한국형 끝장 개발 대회(K-해커톤 대회) 등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연중 개최하여 가상융합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내용 | 시행일자 |
|---------|--------------------------|---------------|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5-03-04 시행 |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 및 후속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 | | |
|-------|----------------------|---------------|
| 보건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025-03-06 시행 |
|-------|----------------------|---------------|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범위를 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의료기술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의 대상을 제한적 의료기술 등까지 넓히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5-03-04 시행 |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02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면적의 상한을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상향하고, 친환경축산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되, 6회째 이후에는 그 지급단가와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3-04 시행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은 최초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균분하여"를 "동일하게 나누어"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9-07 시행 예정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견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3-06 시행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5.03.04. ~2025.03.26. |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tel:044-202-6337)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5.03.07. ~2025.04.02. |
|-----------|----------------|-----------------------------|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전화: 044-202-6532, 팩스: 044-202-6039\)](tel:044-202-6532)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5.03.05. ~2025.04.14. |
|---------|--------------------|-----------------------------|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안 제20조),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안 제24조),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안 제25조) 삭제
- ② 규제의 재검토 규정 중 골프장 부가금 수납방법 등 삭제 (안 제44조의2 제5호 삭제)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044-203-3125, 팩스: 044-203-3489\)](tel:044-203-312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04.
~2025.04.14.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18조제8호)
-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 (안 제27조 및 별표6)
- ③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 (안 별표4)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mailto:환경부_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92, 팩스: 044-201-739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06.
~2025.04.15.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mailto:국토교통부_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366, 팩스: 044-201-353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40인)

2025-03-06 발의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제2항)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0조의3제2항)**

정무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70조 및 제72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3-06 발의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446조제18호)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025-03-06 발의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성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
승의원 등 14인)

2025-03-07 발의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2025-03-04 발의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9조의1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5-03-07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
병훈의원 등 10인)

2025-03-04 발의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을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을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소금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2025-03-04 발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6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2025-03-04 발의

공기열에너지는 공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 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 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2025-03-04 발의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5-03-04 발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한규의원 등 12인)

2025-03-06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기업위원회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안 제2조제4호 등)
- ② 중소기업위원회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28조)
- ③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6)
-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2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5-03-07 발의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음. 사안에 따라 가해행위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국제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일정수준의 제재가 뒤따르기는 하나, 인권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과의 거래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무역을 지속하는 현실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여론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무역거래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더 높은 인권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음.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기준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최근 ESG 경영원칙의 보편화에서 보듯, 거래상대의 인권침해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기업과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무역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에서 상무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특정 단체를 목록에 올려 수출입 등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조제4호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2025-03-06 발의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등 18인)

2025-03-04 발의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및 ‘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각각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함.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키며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함. 아울러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의 경우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2025-03-04 발의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안 제22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025-03-04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3-06 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5-03-07 발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5-03-07 발의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2025-03-07 발의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2025-03-04 발의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복합환승센터 조성·도심융합특구개발·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용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용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가정용에 비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율은 38.7%에 불과한 실정임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하였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 결과임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에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제19조의5 신설,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25-03-06 발의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33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외통위 | 전체회의 | 3/11(화) 14:00 | - 법안 등 의결, 현안질의 |
| 국토위 | 교통법안소위 | 3/11(화) 10:00 | - 법안 심사 |
| | 인사청문회 | 3/12(수) 10: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3/13(목) 11:00 | - 법안 의결, 현안 보고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 및 세미나 | 3/10(월) 04:00 |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 :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 | 민병덕 의원실 |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
| | 3/10(월) 14:00 |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의료데이터 현황과 나아갈 길 | 최수진 의원실 등 | 의원회관 1소회의실 |
| | 3/11(화) 14:00 |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세미나 | 조승환·주철현 의원실 등 | 의원회관 3세미나실 |
| | 3/11(화) 15:30 |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 이학영·백선희 의원실 등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 3/12(수) 13:30 |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 민병덕 의원실 |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
| | 3/12(수) 14:00 | 공동주택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 정동영·김정호 의원실 등 |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
| | 3/13(목) 10:00 |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신장식 의원실 |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
| | 3/14(금) 10:00 | [대전환포럼 기획,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③]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제안 | 박홍근 의원실 등 |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
| 자료집 등 | 3/12(수) | 「이달의 입법민원」 (2025.2호) 발간 | 국회사무처 | |
| | 3/10(월) | 「Data+」 제4호(2025-4호) 발간 | 국회도서관 | |
| | 3/11(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5호(2025-2호) 발간 | | |
| | 3/12(수) | 「금주의 서평」 제719호(2025-10호) 발간 | | |
| | 3/12(수) | 「World&Law」 2025-4호 발간 | | |
| | 3/11(화) | 「NABO Focus」 제95호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 등 | 3/5(수) | 「금주의 서평」 제718호(2025-9호) | 국회도서관 | |
| | 3/5(수)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5호(2025-5호) | | |
| | 3/4(화) | 「NABO Focus」 제93호 | 국회예산정책처 | |
| | 3/4(화) |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안을 위한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 국회입법조사처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04~2025.03.0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3/4(화) | 금융 |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5 (2025년 3월) |
| 3/5(수) | 국제상사중재 | 국제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활용 범위 - 분쟁해결 합의 시 주의점 |
| 3/5(수) | 지적재산권 | 특허의 출원일 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명시적 비밀유지약정 없이 상당수 납품되었음에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 3/5(수) | 지적재산권 |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
| 3/6(목) | 국방획득/방위산업 |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3/6(목) | ESG |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 |
| 3/6(목)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
| 3/7(금) | 노동 | 월간 노동 뉴스레터 |
| 3/7(금) | 금융 |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5 (2025년 3월 1째주)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